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9.6%를 기록하며 2011년 7월 81.6% 이후 다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폭설,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2011년 초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손해율 안정, 즉 자동차보험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그동안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시행해왔으나, 제도 개선 이후 손해율은 일시적으로 안정된 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음. 또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로 경영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자동차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자동차보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함.

■ 2012년 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9.6%로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손해율이 2011년 7월 81.6%를 기록한 이후 2012년 6월 69.3%까지 안정되었으나 다시 악화되는 모습인데, 폭설과 강추위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다수임.
-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와 더불어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영안정성은 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음.
 - FY2012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은 5,438억 원 적자를 기록하여 FY2010년 1조 4천억 원의 적자에서 개선되었으나 누적적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임.

■ **새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통한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제도의 효과성이 의문시됨.**

-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산정 방식 중 범위요율 적용과 할인·할증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하였음.
 - 2010년에도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손해율 안정을 모색하였는데, 『비례공제 방식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손해율이 안정되기도 하였음.¹⁾
- 정부와 감독당국은 손해율 안정을 위해 주기적인 제도개선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의 지속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경과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는데, 손해율 상승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분보다 발생손해액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라는 근본적 제도변화 이후 보험료 인상폭은 억제되고 있으나 보험영업이익 누적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2001년 8월 자동차보험 순보험료를 자유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자사요율을 산정하여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 이후 온라인사들이 진입하면서 보험료 경쟁이 심화되었고, 온라인사 진입 초기의 사업비 경쟁에서 보험위험의 보험료 반영 폭을 축소시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요율자유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FY1998 이후 임의보험 경과보험료 증가율은 연간 5.8%이나 손해액 증가율은 연간 7.3%를 기록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경과보험료 증가율은 연간 3.0%이나 손해액 증가율은 연간 5.3%로 나타남.
 - 전용식·채원영(2013)은 자동차보험 요율조정 이후 손해율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보험회사들이 미래 발생손해액 예측오차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²⁾
- 미래 발생손해액의 예측오차가 크다는 점은 현재 시점의 경쟁이나 사회적 여론에 의해 보험료 조정에 과거 손해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

■ **감독당국의 정책 지향점과 정책 실행간의 괴리로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1) 기승도(2012), 「FY2011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 전용식·채원영(2013),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정책지향점은 자동차보험료와 상품의 자유화이나 자동차보험 정책 실행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간접적 억제 정책을 취해온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책지향점과 정책실행 간의 괴리로 자동차보험 보험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손해율이 악화될 때마다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정책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자동차 보험료가 가입자들의 보험위험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후생이 악화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음.
 - 보험료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성적인 적자구조는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켜 경영효율화와 보험사기 억제 유인 등을 취약하게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감소할 우려가 있음.
-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